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작성일: 2026.10.30

쓰임: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토론회 주 발제문

작성자: 김태균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교육위원장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들어가는 말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 피지컬 AI ·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독점자본의 투자와 생산, 노동과 지역의 자원 배분을 재편하는 국가사업이다. 자본은 공장과 연산 시설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정권은 전력 · 용수 · 토지 · 금융 · 인허가와 법 · 제도를 결합해 그 투자를 떠받친다. 노동자 · 민중의 자원과 노동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지만, 투자와 생산을 지휘하고 성과를 차지할 권리는 자본의 수중에 남는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투자 총액의 크기가 아니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부담하며, 누가 차지하는가이다.

이 산업재편은 세 경로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산업정책, 민주노총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 추진, 초광역특구법 입법이다. 정책은 투자 방향과 국가 지원을 정하고, 입법은 기업의 투자와 노동력 이용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운동을 그 재편의 협의와 조정 과정에 묶는 정치적 통로가 된다. 이 세 문제를 따로 떼어 놓고서는 정권과 자본의 추진 전략도,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도 온전히 밝힐 수 없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노동권 후퇴를 막고 요구를 반영하겠다고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 발의는 추진되었다.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얻는 것과 자본의 요구를 저지할 힘을 갖는 것은 다르다. 집행부는 참여를 통해 무엇을 관철할 것이며, 이를 강제할 공동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이 투자와 입법을 진행하는 동안 노동자는 협의의 결론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해고와 외주화, 장시간 노동에 맞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경과

정부·자본의 주요 발표와 계획 | 2026.10.30. 기준



! 기업 지역별 투자계획은 범위가 달라 단순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협약·계획·목표는 실제 집행·완공과 다릅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6.30, 과기정통부 7.16, 삼성·SK하이닉스·현대차그룹 공식 발표

선 싸움을 그 기다림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¹⁾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재편의 내용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와 조직으로 맞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도 참여 반대의 선언으로 끝날 수 없다. 고립된 투쟁을 연결하고, 하청·비정규직·이주노동자가 동등하게 요구와 행동을 결정하며, 지역과 산업을 넘어 함께 싸울 힘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하는 활동가와 조직도 무엇을 조직하고 어떤 투쟁을 책임질 것인지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철회·사회적 합의주의 추진 철회·초광역특구법 철회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공동요구와 결합하자. 기술의 발전을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내주지 말자. 고용 보장,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비정규직 철폐와 원청 책임, 노동자·주민의 결정권을 요구하자. 이번 전국 토론회는 이 요구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조사와 교육, 투쟁 지원과 공동행동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자본의 사업 일정에 노동자의 투쟁을 맞추는 정치를 거부하고,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와 행동 일정을 세우자.

1. 산업재편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세 분야는 부품 생산, 정보 처리, 실제 작업 수행으로 연결된다. 반도체는 계산과 기억을 담당하고, 데이터센터는 그 부품을 모아 대규모 AI 학습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피지컬 AI는 센서·카메라 등으로 주변을 파악하고 판단해 로봇과 기계를 움직인다. 공장·물류·서비스의 작업 방식까지 바꾸려는 구상이다. 모든 자동화 기계가 피지컬 AI인 것은 아니다. 실제 도입 기술과 인원·업무 변경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의 대응도 공장 신설과 장비 도입을 따로 보는 데서 나아가 공급망과 지역을 연결해야 한다.

표 1. 세 사업과 노동자계급의 쟁점

사업	구체적인 내용	투자와 노동의 쟁점
반도체	AI 등의 계산·기억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한다. 공장·소재·장비·포장 및 검사와 전력·용수를 함께 확충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생산거점 확대. 직접고용·하청, 교대제·화학물질·정비 안전
AI 데이터센터	서버·저장·통신설비를 모아 AI 학습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력·냉각·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연산시설 투자와 건설·상시 운영 고용의 구별. 전력·용수 비용 및 시설관리 외주화
피지컬 AI	주변을 감지하고 판단한 결과를 실제 기계의 움직임으로 실행한다. 로봇·자율주행 장비 등에 적용한다.	AI 학습·실증과 로봇 생산·현장 도입. 인원·업무량·작업속도·안전과 교육시간

1)민주노총, 「민주노총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2026.9.17; 고용노동부,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원포인트 대화 참여와 상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추진은 별도 절차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적자기업 구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방어하고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자본의 요구를 국가가 자금·기반시설·입법으로 떠받치는 산업재편이다. 기업마다 수익성과 경쟁 조건은 다르지만, 국가 지원을 통해 투자 비용과 위험을 줄이려는 요구는 결합된다.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별 손익의 차이를 넘어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생산을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삼성전자가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연결 매출은 195.3조 원, 영업이익은 107.4조 원이다. SK하이닉스가 10월 28일 발표한 같은 분기 매출은 104.6155조 원, 영업이익은 83.3338조 원이다. 높은 이익과 생산능력 확보 경쟁은 함께 나타난다. 이 수치는 회사 전체의 해당 분기 실적이며, 개별 사업 부문이나 그룹 전체의 실적과 같지 않다. 현재의 호황도 다음 투자의 회수와 시장 지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²⁾ 높은 이익과 투자 경쟁은 함께 존재한다. 경쟁 압력이나 영업이익의 증감만으로 축적 위기와 이윤율의 변동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자본 지원을 비판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적자에 빠졌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국가는 이익을 내는 자본의 시장 선점과 투자 확대도 떠받친다. 우리의 대응은 기업의 손익을 대신 걱정하는 데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을 지키고 생산에 대한 결정권을 넓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업 발표 이전의 투자협약을 보면 추진 경로가 더 분명해진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2월 27일 정권·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로봇·AI·수소 에너지 분야에 약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6월 종합 발표가 있기 전부터 기업의 새 사업 구상과 지역의 입지 지원이 결합되고 있었던 것이다.³⁾ 4월 6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금융구조 설계와 지원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보증 지원을,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금융과 해외 진출 지원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제 대출 집행액을 뜻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정책금융과 연결하는 통로가 종합 발표 전에 마련됐음을 보여준다.⁴⁾ 6월 29일 정부는 로봇 생산거점과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 투자자금과 전력·용수·입지 지원을 제시했다. 기업의 새 사업 구상이 정책금융과 공공수요, 지

2)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nnounces Third Quarter 2026 Results” , 2026.10.29, <https://news.samsung.com/global/samsung-electronics-announces-third-quarter-2026-results>; SK hynix, “SK hynix Announces 3Q26 Financial Results” , 2026.10.28,

<https://news.skhyunx.com/en/q3-2026-business-results/>.

3)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에 로봇·AI·수소 에너지 혁신성장거점 구축」, 2026.2.27.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news/hyundai-motor-group-to-establish-innovation-hub-to-lead-robotics-ai-and-hydrogen-energy-in-korea>

4)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가속화」, 2026.4.6.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news/hyundai-motor-group-saemangeum-innovation-growth-hub>

역의 자원 배분에 연결되는 과정이다. 지원의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면서 생산과 성과의 지배권은 자본에 남는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⁵⁾

맑스가 설명한 집적과 집중도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집적은 노동자가 만들어 낸 잉여가치의 일부를 다시 생산에 투입하면서 한 자본 아래 생산수단과 노동에 대한 지휘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집중은 이미 존재하는 자본들이 합쳐지거나 다른 자본에 흡수되는 과정이다. 공장 증설과 기업 인수는 모두 자본을 키울 수 있지만 같은 과정은 아니다.⁶⁾

공장이 커지고 기계가 발전하면 노동자의 권한도 커지는가. 자본의 지휘권이 그대로라면 생산성 향상은 해고와 작업속도 강화로 돌아올 수 있다. 노동자가 만든 부를 자본이 차지하고 노동자는 고용을 걱정하는 관계를 거부해야 한다. 기술 발전의 성과를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 고용 보장으로 돌려놓자. 자본의 경쟁을 노동자의 양보로 떠받치지 말자.

2. 사업 추진과 지역·산업별 대응 과제

삼성전자도 서남권 생산거점 확대에 나섰다. 정부의 2026년 6월 30일 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호남에 425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같은 발표에서 SK는 약 470조 원을 들여 메모리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발표된 투자계획이며, 실제 집행액이나 확정된 개별 공장의 가동 일을 뜻하지 않는다. 지역별 고용과 노동조건을 따질 때도 투자총액을 일자리 보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⁷⁾

표 2-1. 주요 정부 발표와 기업 조치 사례

시점	정부의 지원·행정 일정	기업의 투자·실행 일정
2026.2.25	— (기업 발표)	SK하이닉스: 첫 팹 추가 시설투자 21.6조 원 발표. 기존 발표분 포함 약 31조 원
2026.2.27·4.6	새만금 투자협약·정책금융 협력	현대차그룹: 약 9조 원 투자계획과 금융협력 경로 마련
2026.6.29·7.6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후속 민관점검회의	기존 기업 투자계획과 국가 기반시설·시장 지원의 결합
2026.6.30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전력·용수와 산업단지 조성 지원 발표	삼성: 호남 425조 원, 메모리 팹 2기·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SK: 약 470조 원, 메모리 팹 2기·1GW AI 데이터센터 계획
2026.9.22	새만금개발청: AI 데이터센터 건축심의 착수 발표	현대차그룹: 9월 건축심의 절차·태양광 사업법인 추진
2026.10.23·30	정부: 특구·규제·기반시설 지원방향 발표	현대차그룹: 10.30 참여 계열사 투자 확정 발표·새만금사무소 개소

5)산업통상부,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정책브리핑, 2026.6.2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294>

6)칼 맑스, 『자본론: 경제학 비판』 제1권 제4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2020, 제23장 제2절, 1030~1037쪽.

7)정책브리핑, 「SK·삼성·애플,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2026.6.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382> (확인: 2026.10.30). 삼성 425조 원과 SK 약 470조 원은 이 발표의 서남권 투자계획이며, 다른 발표의 투자 총액에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표 2-2. 발표 자료에 제시된 향후 목표

시점	정부의 지원·행정 일정	기업의 투자·실행 일정
2026.11월 예정	— (해당 날짜의 정부 일정 미제시)	현대차그룹: 데이터센터·GPU 서비스 사업법인 각각 설립 계획
2027년 목표	정부: 데이터센터 핵심장비 국산화·고도화 지원 추진	SK하이닉스: 용인 첫 클린룸 2월 개방 목표. 현대차: 새만금 데이터센터 3월 착공 목표
2028~2030년 목표	정부: 2030년 퍼지컬 AI 세계 1강 도전 목표	현대차: 로봇 클러스터 2028년 착공·2029년 1단계 양산 계획, 데이터센터 2030년 초 서비스 목표
2030년 말까지 계획	— (해당 날짜의 정부 일정 미제시)	SK하이닉스: 용인 첫 랩 골조·후속 클린룸 시설투자 계획

표 2-1은 발표·협약·조직 설치 등의 조치를, 표 2-2는 향후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업의 착공과 준공, 클린룸 개방과 양산, 서비스 개시는 서로 다른 단계이다. 향후 일정은 발표 당시 계획이며 실제 집행과 구별한다. 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그룹의 주요 추진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새만금에서는 9월 22일 건축 심의 착수 발표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10월 30일 참여 계열사의 투자를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현장사무소를 개소했다. 같은 발표는 11월 데이터센터 건축·인프라 법인과 GPU 서비스 법인의 설립, 2027년 3월 착공, 2030년 초 정식 서비스 개시를 계획으로 제시했다. 데이터센터의 5.8조 원은 로봇·수소·태양광 등을 포함한 전체 약 9조 원 계획의 일부이다. 설계·허가·건설과 서비스 개시를 구별해야 하며, 예정된 투자를 실제 집행액이나 확정된 고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자본은 사업법인을 세우고 현장사무소를 열며 착공을 준비한다. 노동운동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원과 외주계약, 공공지원의 조건을 공개시키고 건설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노동자의 요구를 세워야 한다. 공사가 끝난 뒤에 고용을 묻는 순서를 되풀이하지 말자.⁸⁾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월 25일 용인 첫 랩의 신규 시설에 2030년 말까지 약 21.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발표분 약 9.4조 원과 합친 첫 랩 시설투자 규모는 약 31조 원이다. 첫 클린룸 개방 목표도 2027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클린룸 개방은 전체 단지 완공이나 전 생산능력의 즉시 가동과 같은 뜻이 아니다. 이 일정은 삼성전자 국가산단의 랩 일정과도 구별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기업과 사업의 투자액·완공 시점을 하나로 섞지 말아야 한다. 자본은 첫 가동을 앞당기려 한다. 노동자는 그 속도를 고용과 안전을 양보할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정비·생산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의 요구로 묶고, 생산능력 확대의 성과를 인원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돌려놓아야 한다.⁹⁾

8)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 AI 데이터센터 설립 속도 … 새만금 AI 밸리 투자 본격화」, 2026.10.30,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news/hyundai-motor-group-ai-data-center-saemangeum-investment>. 2027년 3월 착공·2030년 초 서비스 개시 및 11월 법인 설립은 발표 당시 계획이다.

9)SK hynix, “New Facility Investment for Yongin Semiconductor Cluster”, 2026.2.25,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추진 방향에서 SK·GS·네이버 등의 AI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550조 원을 지원하고, 전력·부지·인허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핵심 솔루션과 IT·전력·냉각 장비의 국산화·고도화를 추진하며, 퍼지컬 AI는 2030년 세계 1강을 목표로 제시했다. 550조 원은 민간투자 구상이지 그만큼의 국비가 지출됐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산업 목표 역시 개별 기업의 확정된 공사·채용 일정과 다르다. 기업의 설비 확대에는 전력과 부지와 인허가를 한데 묶어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순서를 거부하자. 지원을 결정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 고용·안전·환경 의무와 노동자·주민의 결정권을 요구해야 한다.¹⁰⁾

지역 구상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거점과 전력·용수 지원, 서남권 반도체·전력·자율주행, 새만금 AI·로봇·에너지의 결합이 두드러진다. 중부권의 디스플레이·바이오·배터리, 대경권의 소재·모빌리티·AI 로봇, 동남권의 조선·우주항공·원전, 강원도의 바이오·특수 반도체, 제주의 재생에너지·위성·바이오 등은 연계 성장엔진이다. 이 지역산업 전체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자체와 동일시하거나 발표액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¹¹⁾

지역 노동운동은 발표와 현장을 대조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 언제 투자하는지, 실제 착공했는지, 공공지원은 얼마인지, 직접고용과 하청고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발표된 기대효과를 이미 실현된 성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역의 조사 항목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투자 주체와 사업 일정, 공공자금과 토지·전력·용수의 부담 주체, 직접고용·하청고용 인원, 노동시간·작업강도·안전의 변화를 함께 모아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홍보 수치를 읊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조합원과 주민의 경험으로 검증해야 한다. 지역별 결과를 산업과 공급망의 공동요구로 연결하는 것이 전국 토론회의 과제이다.

지역·산업별 토론은 자본의 발표를 다시 읽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 첫째, 투자와 기술 도입이 인원·고용형태·노동시간·작업강도·안전을 어떻게 바꾸는지 밝히

<https://news.skhyun.com/en/new-facility-investment-for-yongin-semiconductor-cluster/>. 현대차 로봇 클러스터 일정: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전북자치도·전북대와 미래산업 인재육성 협력」, 2026.7.20,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news/hyundai-motor-company-jeonbuk-future-industry-talent>.

로봇 공사·양산 일정은 해당 발표의 계획이다.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추진방향, 정책브리핑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2026.7.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284>. 2027년 장비 지원과 2030년 퍼지컬 AI 목표는 정부의 정책 일정이다;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2026.6.29; 같은 부처의 2026.8.26·9.1·10.13 발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현대차그룹 ‘AI 데이터센터’ 건축심의 착수」, 2026.9.22,

<https://www.saemangeum.go.kr/sda/en/brd/view.do?key=2010214904338&nttSn=11575>.

11)산업통상부, 「“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 2026.8.26,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132/view>;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 2026.8.21.

자. 둘째, 이미 벌어진 투쟁의 요구와 경험을 모아 공동요구를 세우자. 셋째, 지역 · 산업이 맡을 조사 · 교육 · 연대 사업과 전국이 책임질 지원을 정하자. 자본은 투자와 공사의 일정을 가지고 움직인다. 우리도 요구와 행동의 일정을 세워야 한다. 당사자의 경험과 확인한 자료를 모으고, 그 토론을 집행할 결정으로 발전시키자.

3. 국가 지원과 초광역특구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지배 수단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소유를 지키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야 하는 질서를 유지한다. 산업정책도 이 관계와 떨어져 있지 않다.¹²⁾

국가는 개별 기업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기업들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개별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제한하면서 자본주의 전체가 유지될 조건을 마련하기도 한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교육과 의료, 산업 전반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금융과 거래 질서를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소유 관계와 생산 질서를 유지하는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국가와 정권도 구별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 · 행정 · 사법 · 강제기구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지배체계이며, 정권은 일정 시기에 국가권력을 운영하는 정치세력과 그 통치체제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과 통치 방식, 노동운동이 싸우는 조건도 달라진다. 그러나 정권 교체만으로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은 정책의 차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어느 자본가 정권에도 자신의 요구와 조직을 중속시키지 않아야 한다.

노동시간 제한과 고용 보호, 사회보장은 노동자의 집단적 투쟁으로 쟁취하고 지켜야 할 권리이다. 개혁의 성과는 국가의 중립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국가의 계급성은 개혁 투쟁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본은 권리를 되돌리려 하므로 법적 보장과 함께 이를 지킬 조직과 행동 능력을 키워야 한다.¹³⁾

새만금 사례에서도 약 9조 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곧바로 국비 지원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기업의 직접 투자, 정책금융의 대출 · 보증, 도로 · 전력 · 용수 등의 기반시설 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대출은 상환 조건을, 보증은 사고 발생 시 부담을, 기반시설은 이용료와 건설비 부담을 각각 따져야 한다. 지원 약속을 실제 집행액으로 계산하거나 모든 비용을 이미 공공부문이 떠안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부담 구조를 확인할 때까지 비판과 요구를 미룰 이유는 없다. 정권과 기업은 기반 시설별 비용 부담, 금융 지원 조건, 고용 의무와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노동자는 그 지원을 결정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지도 물어야 한다. 공공지원이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 주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12)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 사유재산 · 국가의 기원』, 제9장 「야만과 문명」.

13) 칼 맑스, 『자본론: 경제학 비판』 제1권,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2020, 「노동일」 장 제6~7절.

생활을 보장할 권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바꾸어야 할 구조이다.

정부가 제시한 특구 정책은 노동 특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월 23일 발표는 지방 정부와 기업의 계획 신청, 심의와 승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특례·규제유예와 재정·금융·인프라 지원을 묶었다. 투자 유치의 속도와 기업의 비용 절감이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는 동안 노동자와 주민은 어떤 결정권을 갖는가. 노동 특례가 빠져도 이 질문은 남는다.¹⁴⁾

초광역특구법은 노동 특례 포함 안과 주요 노동 특례 제외 안을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20일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 발의와 노동 특례 제외 안의 발의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노동 특례가 없는 안이 제시되었다고 포함 안이 철회되거나 최종 입법에서 노동권 후퇴가 저지된 것은 아니다. 노동 특례 저지와 함께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과 공공자원을 재편하는 특구 정책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¹⁵⁾

민주노총의 10월 21일 지침은 노동 특례 포함 안의 쟁점으로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기간제 사용 기간 4년 확대를 제시했다. 이것은 시행 중인 일반 규정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분석이다.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상태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투자 비용을 줄이려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과 합의 요건은 법안별로 대조해야 한다.¹⁶⁾

두 법안 모두의 철회 요구는 노동 조항이 같다는 주장이 아니다. 노동권 후퇴를 저지하면서 산업과 지역을 기업의 투자 조건에 맞추어 재편하는 특구 정책을 바꾸자는 요구이다. 공공지원의 사용 목적과 조건을 노동자·주민의 필요에 따라 정하고, 교육·의료·환경·생활권을 기업 유치의 부대조건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법안별 공통·차이 조항의 대응 표는 후속 공동조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4.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고 독립적 투쟁을 조직하자

사회적 합의주의는 국가경쟁력과 자본의 축적을 공동목표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요구와 행동을 그 목표 아래 두는 계급협조 노선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하는 활동과 구별된다. 투쟁으로 힘을 모아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성공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떠안고 협의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 행

14)관계부처합동,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정책브리핑, 2026.10.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94>.

15)고용노동부,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8. 법안의 추진

방향과 별개로 법안별 전문과 심사 단계는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16)민주노총, 「긴급 지침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저지 투쟁 계획」, 2026.10.21,

<https://nodong.org/notice/7949245>. 지침이 분석한 노동시간·선택근로·기간제 특례를 요약한 것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이미 시행되는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

동을 제한하는 노선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노동 특례 법안 발의를 알리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자신이 투자와 입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를 그 조정 과정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같은 수의 대표를 앉혀도 자본의 투자·고용 결정권과 국가의 입법·예산 권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회의장 접근을 노동자의 투쟁력과 같은 것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¹⁷⁾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9일 대의원대회 유회에 관한 입장문에서 선거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고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 전략이 노동자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하고 현장의 싸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협의를 사실만으로 양보를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 성명과 집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 중심 전략의 문제를 덮을 수도 없다. 무엇을 요구했고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행동을 실제 집행했는가가 판단 기준이다.¹⁸⁾

원칙은 분명하다. 고용·임금·휴식·안전의 요구를 기업의 수익과 투자 성공에 종속시키지 말아야 한다. 교섭을 이유로 파업과 연대를 일괄 유보해서는 안 된다. 대표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고 경과를 공개하며 중요한 변경과 합의는 민주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원청·정규직 일부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하청·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거래해서도 안 된다. 합의는 서명 자체가 아니라 현장의 권리와 계급적 힘의 확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족경제와 국가경쟁력을 노동자의 독립적 요구보다 앞세우는 국가주의는 계급협조를 정당화한다. 같은 민족의 자본이라는 사실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를 같게 만들지 않는다. NL 노선이 국내 자본과 자유주의 정권의 성공을 위해 노동자의 독자 행동을 뒤로 미룰 때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자주·반전·민주주의의 과제도 노동자계급 자신의 조직과 요구로 수행해야 한다.¹⁹⁾

집행부는 해고·외주화에 맞선 현장에 어떤 인력과 재정을 배치했는지, 요구가 거부될 때 어떤 공동행동을 집행할지 공개하라. 조합원은 그 기록으로 집행을 통제해야 한다. 협의를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약 종료와 노동강도 강화는 멈추지 않는다. 참여 찬반 논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당면 투쟁을 미룰 수 없다. 자본의 정책 일정에 노동자의 행동 시점을 맡기지 말자.

5. 3대 철회와 독립적 공동요구

노동전선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철회,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 철회, 초광역특구법 철회

17)고용노동부, 앞의 2026.10.20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등,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사전브리핑」, 2026.10.23.

18)양경수,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위원장 입장문」, 민주노총, 2026.10.9.

<https://nodong.org/notice/7947895>

19)채만수, 「다시, 민족 문제의 계급적 본질에 관하여—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정세와 노동』 제165호, 2020.9, 85~111쪽, 특히 103~105쪽.

회를 요구한다. 산업재편 구상과 법·제도적 지원, 노동운동을 공동책임에 묶는 정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함께 비판하면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공동요구를 세워야 한다. 기술 연구와 생산력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결정권을 노동자·민중의 필요에 따라 바꾸자는 요구이다.

표 3. 공동요구와 현장 과제

공동요구	현장에서 확보할 권리	공동행동의 방향
해고 금지·고용 보장	인원계획·외주계약 공개	기술 전환을 이유로 한 해고 저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업무량 감축·유급 교육·신규채용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공동교섭
비정규직 철폐·원정 책임	상시업무 직접고용·원하청 공동교섭	하청·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노동기본권·동등한 권리	고용형태·국적을 넘는 결정 참여	이주노동자와 국제적 연대
공공성·생활권	교육·의료·환경·안전 우선	노동자·주민의 공동 대응
노동자 통제	투자·작업 변경 정보와 제약 권한	대표의 보고·승인·교체

노동자 통제를 회사의 설명을 듣는 자문기구로 만들지 말라. 기계 도입과 업무 변경, 인원과 외주계약, 작업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노동자가 검토하고 제약할 권한을 쟁취해야 한다. 대표자의 임기와 보고, 승인과 교체 절차를 정하고 그 권한을 현장의 집단적 힘으로 뒷받침하자. 정보를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정보로 판단하고 행동할 힘을 만들자.

정보공개와 작업 변경에 대한 통제권은 당장 확보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확대만으로 자본의 소유와 국가권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엥겔스가 지적했듯 국가 소유로의 이전만으로 생산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시설을 소유하거나 재정을 투입한다는 사실은 노동자 통제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와 공적 소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투쟁에서도 생산의 목적과 운영을 누가 결정하며 노동자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²⁰⁾

6. 현장 활동가조직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

노동조합과 활동가조직, 노동자계급 정당의 역할은 구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노동자도 공동의 권리를 위해 단결하는 대중조직이다. 활동가조직은 그 안에서 노선과 실천을 제안하고 검증받으며, 사업장과 산업을 넘어 활동가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하려면 개별 사업장의 요구를 넘어 소

20)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장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 제3절.

유와 국가권력, 전쟁과 사회 전체의 생산 방향에 대한 공동의 강령과 전국적 정치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장 활동가조직이 자신을 곧바로 그 정당으로 선언한다고 이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첫째, 활동가조직은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과 안전을 조합원과 함께 조사하고 요구를 만들며, 당면 투쟁의 실무와 연대를 책임지자. 하청·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가 직접 발언하고 결정하도록 조직하자. 투쟁 속에서 새로운 활동가를 길러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정당 건설 이후로 미루는 조직은 그 정당의 토대도 만들 수 없다.

둘째 과제는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연결하는 일이다. 해고와 외주화, 장시간 노동이 개별 사업주의 태도만이 아니라 산업재편과 법·제도, 자본의 소유와 결정권에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밝혀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공동학습을 현장조사와 결합하고, 그 결과를 공동요구와 행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론학습은 결론을 외우게 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회 전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과제는 흩어진 현장 활동을 지속적인 정치적 조직화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사업장·지역·산업을 잇는 연락망과 정기 토론, 공동 교육과 선전, 투쟁 지원을 운영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 비판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 활동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강령과 조직 원칙을 토론하고 실천으로 검증해야 한다. 선거 때의 후보 지지 연합이나 일회성 집회 동원만으로 이 과제를 대신할 수 없다.

넷째 과제는 조직 자신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을 확립하는 일이다. 사업과 재정, 담당자의 집행을 구성원에게 보고하고 비판과 토론을 보장하며, 결정한 사업은 역할과 일정을 정해 집행하고 함께 평가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특정 정파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거나 활동가조직의 결정을 대중조직에 그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도력은 조합원의 자주적 판단을 대신하는 권한이 아니라, 설득과 실천의 성과로 얻는 신뢰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 실천과 함께 자본가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 개혁정권의 성공이나 국내 독점자본의 성장을 노동자 정치의 목표로 삼지 않고,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와 사회변혁의 전망을 자신의 조직과 힘으로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은 당명이나 선거 참여를 먼저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을 떠받칠 현장의 주체와 공동 강령, 지속적인 실천을 형성하는 과제이다.

이 역할을 수행 할 역량 강화는 학습 일정만 늘리는 일이 아니다. 맑스주의 이론학습과 정세·현장 조사, 선전·선동과 교육, 현장 간부의 발굴·양성, 사업장 간 연락과 공동행동을 맡을 담당자를 정하고 필요한 시간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교육과 요구 수립에 반영되고, 교육을 통해 성장한 활동가가 조직화와 투쟁을 맡으며, 그 경험이 다시 노선과 사업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힘을 이름과 선언으로 썬하지 말자. 현장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의 공동요구

로 발전시켰는가. 고립된 싸움에 사람과 재정을 보냈는가.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행동할 힘을 키웠는가. 조직은 이 질문에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지도력은 직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와 함께 싸우며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7. 민주노총 선거와 공동투쟁의 결합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대응은 민주노총 총연맹·지역본부·산별 조직의 지도부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가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민주노총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형성해야 한다.

후보자의 인물과 경력만이 아니라 산업재편에 대한 입장, 노동자의 독립적 요구와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3대 철회 요구는 선거공보의 문구를 넘어 지도부의 실천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총연맹·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는 9월 22일 공고상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선거운동, 11월 19~25일 투표이다. 자료 기준일인 2026년 10월 30일은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한다. 지역과 산별 활동가들은 공개 질의와 현장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노선과 집행계획을 검증해야 한다. 산별·지부·지회의 일정은 각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따르며, 후속 투표 일정도 별도 공고로 확인한다.²¹⁾

후보자의 입장은 공개 질의와 답변,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로 확인해야 한다. 답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도 그대로 공개하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정파의 명칭과 선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약과 실제 행동, 집행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 총연맹 선거에서는 전국 공동요구와 투쟁방침을, 지역본부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특구 추진과 투쟁사업장 지원 계획을, 산별 선거에서는 산업별 고용·노동시간·외주화와 공동교섭 방침을 검증해야 한다.

선거를 이유로 지금의 투쟁을 미루지 말라. 현장의 요구와 투쟁 경험을 후보자의 노선을 판단할 기준으로 세우자. 투표가 끝나도 현장 모임과 연대망은 남아야 한다. 선거에서 모은 힘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 공동투쟁을 확대하자.

8. 전국 토론회에 제안하는 결정 과제

전국 토론회는 지역별 상황 보고를 공동의 요구와 집행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래 다섯 항목을 결정 안건으로 제안한다. 지역·산별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해 담당 주체와 일정을 확정하자. 이견은 쟁점과 후속 검토 책임을 기록하고, 합의한 사업은 누가 언제 무엇을 집행할지 남겨야 한다.

21)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민주노총·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 일정 공고」, 2026.9.22. <https://nodong.org/notice/7946381>

표 4. 전국 토론회 결정사항 정리안

결정 항목	합의할 내용	책임·일정 제안
공동 대응의 원칙·요구	3대 철회와 고용·시간·직접고용·결정권 요구, 쟁점과 이견 정리	종합토론에서 합의 범위 확정
공동조사·연락망	투자·지원·인원·외주화·시간·안전의 공통 조사 항목	지역·산별 책임자 선정, 첫 결과 2주 이내 공유 제안
공동질의·현장 토론	후보자의 입장과 인력·개정·공동행동 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질의	지역 담당자·질의 발송 및 답변 공개 일정 결정
당면 투쟁 지원	투쟁사업장 요청, 인력·개정·방문·공동선전 계획	당사자와 지역·산별이 담당·집행 일정 결정
후속 점검·지속 조직화	미집행 과제·공약 이행·현장 참여 확대·연대망 유지	한 달 이내 점검 회의 제안, 소집 책임자 결정

표의 일정은 토론회에서 결정할 제안이다. 당면 투쟁 지원은 후속 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집행할 일을 정해야 한다. 활동가조직은 조사·교육·연락·투쟁 지원을 맡을 사람을 양성하고, 실제 집행과 현장의 참여 확대를 함께 평가하자.

이 공동사업은 정권에 더 나은 지원책을 요청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당면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자신의 조직과 정치적 힘을 키우고, 생산수단의 소유와 국가권력의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정당을 지향하는 현장 활동가조직은 계급적 독립성, 현장 대중의 민주적 결정, 국제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조사·교육·조직화·공동투쟁을 연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 건설의 강령적·조직적 조건을 형성하되 노동자의 토론과 결정, 실제 투쟁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굴레를 끊고 현장으로부터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현장의 요구를 산업과 지역을 넘는 공동요구로 세우고, 그 투쟁의 경험을 지속적인 정치적 조직화로 발전시키자. 자본의 국가사업에 노동자를 동원하는 정치를 거부하자. 생산과 생활을 노동자·민중의 필요에 따라 바꿀 힘, 노동자계급 자신의 독자적 정치적 힘을 건설하자.